

# 서울시정관련 연구동향

## 사회적 경제 조직에 의한 주택공급 방안

국토연구원 | 연구보고서 | 2013.12.31.

[http://www.krihs.re.kr/html/2\\_paperinfo/report.asp](http://www.krihs.re.kr/html/2_paperinfo/report.asp)

### 주택의 건설 및 공급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기반 구축 주택공급 및 관리주체로서 지속성을 지닐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 강화

- 사회적 경제란 ‘사회적 목적을 지니고 경제활동을 하는 조직 및 실천’
- 사회적 경제 조직에 의한 주택공급은
  - 소규모 호수로 이루어지고 가구특성에 맞는 주택설계를 통하여 개개 수요자의 욕구 충족
  - 입주자 혹은 거주민 상호간에 공유하는 공동의 목표를 지닌 공동체 형성
  -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구입 비용과 임대료 및 관리비로 주거의 안정성 추구
  - 지역사회를 해체하거나 황폐화시키지 않는 주거지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가능성 제시
  - 주택의 건설과 유지관리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
- 사회적 경제 조직의 주택공급 활동에서의 장애요인으로는
  - 안정적인 재원확보의 어려움
  - 사업주체의 역량 부족
  - 기타 제도적 장애요인
- 정책제안
  - 주택의 건설 및 공급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기반 구축
  - 적정입지에 적절한 가격의 토지 제공
  - 착한 주택공급자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프로그램 개발, 중간조직 육성, 관리·감독 체계 구축
  - 주택공급 및 관리주체로서 지속성을 지닐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 강화
  -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활동을 수용하고 지원하는 사회·정치·문화적 분위기 조성

# 일자리 창출형 가젤기업의 입지 및 성장 특성

산업연구원 | 연구보고서 | 2013. 12.27

[http://www.kiet.re.kr/kiet\\_web/main.jsp?sub\\_num=8&state=view&idx=45734&sty=w&ste=일자리&ord=10](http://www.kiet.re.kr/kiet_web/main.jsp?sub_num=8&state=view&idx=45734&sty=w&ste=일자리&ord=10)

지역산업육성정책에서 누락된 가젤산업의 육성이 필요

지방에서 기업유치 및 기업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

- 현황
  - 가젤기업(gazelle firm)은 “종사자 수가 10 인 이상이면서 최근 5 년간 Birch 고용성장지수로 측정한 고용창출 기여도가 모집단 전체의 상위 10% 이내인 기업”
  - 종사자 수 기준으로 가젤기업은 2007 년 평균 191 명 정도의 중소기업이 2012 년 371 명의 중견기업으로 성장
  - 기업 수 면에서 10%를 차지하고 있는 가젤기업이 종사자 수 면에서는 2007 년 27.6%에서 2012 년 44.1%로 증가
- 일자리 창출 및 가젤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여야 할 정책
  - 기업부문: 창업기업과 중소·중견기업의 Two-Track 육성, 가젤기업에 대한 일자리 정책 타키팅
  - 산업부문: 지역별 가젤산업의 탐색 및 정책적 육성
  - 지역부문: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위한 오피스파크 및 리서치파크 조성, 성장기반 취약 기업을 위한 입지공급 및 산학협력 확대
  - 정책부문: 투자-고용-입지를 연계한 법인세 환급제도 추진, 지역산업 인력양성 및 수급체계 개선을 위한 기구 설립
- 시사점
  - 일자리정책의 초점을 창업기업과 가젤기업에 안배하여 예산 배분
  - 지역산업육성정책에서 누락된 가젤산업 육성의 필요성
  - 지방에서 기업유치 및 기업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방안 강구
  - 지방소재 비가젤기업이 가젤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유도

# 공유가치창출(CSV)을 통한 지역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강화방안

산업연구원 | 연구보고서 | 2013. 12. 27.

[http://www.kiet.re.kr/kiet\\_web/main.jsp?sub\\_num=8&state=view&idx=45758&sty=W&ste=공유가치창출&ord=10](http://www.kiet.re.kr/kiet_web/main.jsp?sub_num=8&state=view&idx=45758&sty=W&ste=공유가치창출&ord=10)

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CSV 전략의 필요성 인식

CSV는 재정부족으로 사회적 현안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정부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음

- 배경
  - 공유가치창출(CSV)이란 사회의 요구와 문제를 해결해서 경제·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것
- 정책적 시사점
  -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CSV 전략의 필요성 인식
  - 사회와 관련이 많은 산업일수록 CSV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쟁력 강화에 관심이 높은 편
  - 우리나라 기업들은 선진국에 비해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낮은 편
  - 정부는 사회적 현안 해결을 위해 기업의 CSV 활동을 적극 유도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의 모색이 필요
  - CSV는 재정부족으로 사회적 현안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
  - 중앙정부는 기업의 CSV 활동에 대한 세제혜택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R&D 투자, 펀드와 보조금을 통하여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
- CSV를 통한 지역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강화방안
  - 가치전략부문: 지역 내 사회적 자본 형성 및 금융서비스 지원시스템 구축 등
  - 수요조건부문: 'CSV 기술개발 투자 펀드' 조성, '지역공동체 기술개발 센터' 조성 등
  - 요소조건부문: 'CSV 공급망 동반성장 협의회' 구성, 사회적기업 활용한 CSV 확대 등
  - 클러스터부문: CSV를 통한 혁신 클러스터 및 일자리 창출 등

# 여성노인의 노후빈곤 현황 및 대응정책

한국보건사회연구원 | 연구보고서 | 2013.12.31

[https://www.kihasa.re.kr/html/jsp/publication/research/list.jsp?key=title&year\\_value=2014&query=%bfa9%bc%ba%b3%eb%c0%ce](https://www.kihasa.re.kr/html/jsp/publication/research/list.jsp?key=title&year_value=2014&query=%bfa9%bc%ba%b3%eb%c0%ce)

## 여성노인의 빈곤해소를 위해서는 연금제도 개선과 현행 공적 사회서비스 제도의 개선이 필요

- 현황
  - 기초노령연금은 남성노인이 약 139 만명, 여성노인이 255 만명 수급하고 있으나 80 세이상 수급자 중에서는 여성노인의 비율이 75% 이상을 차지
  - 여성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해서는 기초노령연금만으로는 매우 부족
- 여성노인의 빈곤해소를 위한 시사점
  1. 연금제도 개선
    - 기초연금 도입과 돌봄노동을 보상하고 성인지적 공적연금제도 체계 구축
    - 저소득 노인 지원체계의 내실화와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한 실효성 강화
  2. 현행 공적 사회서비스 제도의 개선
    -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개선
    - 여성노인의 경제활동 지원
      - 노노(老老)케어 사업을 통한 여성노인의 사회참여 확대
      - 여성노인 일자리 정책홍보 및 지원
    - 여가 및 보건생활 지원
      - 경로당의 기능강화를 통한 여가, 보건,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의 다양화
      - 노인전문상담센터 확대를 통한 고충 상담
    - 주거생활 지원
      - 여성노인친화형 주거개조
      - 저소득층 노인가구에 대한 주거비 지원

# 선진국 진입, 사회자본 확충이 좌우한다 : 사회자본(Social Capital)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

현대경제연구원 | VIP 리포트 | 2014. 1. 20

<http://www.hri.co.kr/report/main.asp>

## 사회적 갈등이나 법질서 위반 행위 등은 사회문제뿐 아니라 경제발전에도 피해를 유발 작은 약속부터 지키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과 신뢰사회를 붐업시키는 방안 필요

- 사회자본의 중요성
  - 최근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이나 법질서 위반 행위 등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경제 발전에도 직·간접적인 피해 유발
  - 우리나라의 법·질서 지수는 OECD 국가 중 하위 수준
- 융통성에 밀린 신뢰, 작은 준법정신부터 실천하자
  - 융통성을 원하는 사회
    - 우리나라 전체 사회시스템에 대해 신뢰하는 국민은 과반수 이하(46.4%)
    - 자녀에게 법질서 준수보다 융통성있는 삶을 원하는 부모는 과반수(50.1%)
  - 신뢰사회가 안되는 4 가지 요인
    - 작은 준법정신에 소홀
    - 사적 관계가 우선
    - 결과 지상주의 만연
    - 규정대로만 하면 타인과의 관계가 불편
  - 편법의존 경향 극복을 위해 관련 법 개정(45.4%)이 필요
- 시사점
  - 작은 약속부터 지키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 필요
  - 사회시스템 각 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신뢰 프로세스 구축방안이 필요
  - 방송 프로그램이나 시민단체 운동 등 신뢰사회를 붐업시키는 각종 방안의 마련이 필요
  - 사회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신뢰사회로의 전환 계기의 마련이 필요

# ‘Working Mom 이 일하기 좋은 기업’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

LG 경제연구원 | Weekly 포커스 | 2014. 1. 13

<http://www.lgeri.com/management/organization/article.asp?grouping=01020200&seq=521>

## ‘워킹맘이 일하기 좋은 기업’을 만들기 위해 글로벌 기업들이 노력하는 이유는 일과 가정의 불균형으로 인한 갈등은 기업의 성과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

- 배경
  - 미국의 'Working Mother'지는 매년 '워킹맘이 일하기 좋은 100 대 기업'을 발표
- Working Mom 이 일하기 좋은 기업의 특징
  - 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부모 육아 휴가 제공
  - 위급 상황 시 육아 지원
  - 자율적이고 유연한 근무 환경 제공 : 유연근무제도와 원격근무제도
  - 여성 리더십 및 역량 개발 지원
- ‘워킹맘이 일하기 좋은 기업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
  - 일하는 부모(Working Parents)의 시대 도래가 하면서 구성원들의 일과 삶의 불균형 증가
  - 여성의 사회적 진출 증대와 핵가족화가 되면서 부부의 성 역할,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역할 변화 등 구성원들의 가치관 변화
  - 구성원의 일-가정의 불균형은 기업의 성과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
- Working Parents 가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변화해야 할 때
  - 인구 통계학적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로 우리나라의 가족친화경영은 더욱 확산될 전망
  - 정부가 2007 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였기 때문에 기업들은 가족친화경영 도입 추세를 피하기 어려울 것
  - 기업이 가족친화경영 도입시 유의해야 할 점
    - 글로벌 기업들은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가족의 문제라는 관점으로 보는 반면, 우리 기업들은 아직도 여성의 문제라는 관점으로 보는 경향이 강함
    - 가족친화경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리더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

# 1인 가구 증가, 소비지형도 바꾼다

LG 경제연구원 | LGERI 리포트 | 2014. 1. 7

<http://www.lgeri.com/economy/domestic/article.asp?grouping=01010100&seq=959>

## 1인 가구화의 진행에 맞는 제도 및 인프라의 개선

### 1인 가구화에 따른 주택시장의 공급 다변화 정책의 활성화, 지역 커뮤니티 및 문화시설 증설

- 1인 가구화 동향
  - 우리나라 1인 가구는 1990년 9.0%에서 2010년 23.9%로 빠르게 증가
    - 50대 중년 남성의 1인 가구수는 2000년 10만 가구에서 2010년 29만 가구로 증가
    - 70대 이상 여성의 1인 가구수는 2000년 31만 가구에서 2010년 65만 가구로 증가
  - 1인 가구가 2인 가구의 1인당 소비보다 8% 높게 소비함으로 단기적으로 1인 가구의 증가는 소비를 늘리는 효과가 나타남
- 시사점
  - 1인 가구화 속도에 맞는 제도 및 인프라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사회·경제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뿐 아니라 국가차원에서도 대비가 필요
  - 장기적으로 1인 가구화에 따른 소형주택, 셰어하우스 등 주택시장의 공급 다변화 정책의 활성화
  - 노인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피하기 위해 고령층의 IT 교육 확대 및 고립과 소외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지역 커뮤니티와 문화시설 증설
  - 향후 고령가구의 병원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관련 서비스의 확대 및 의료제도 정비
  - 1인 가구의 확산으로 장기적으로는 소비수요 둔화를 극복하기 위한 수요확충 방안이 필요

# 과학적 국토정책을 위한 공간빅데이터 활용방안

국토연구원 | 연구보고서 | 2013. 12. 31

[http://www.krihs.re.kr/html/2\\_paperinfo/report.asp](http://www.krihs.re.kr/html/2_paperinfo/report.asp)

## 공간 빅데이터 체계 구축을 위해 범부처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성 공공 및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 빅데이터의 표준 및 품질확보를 위한 법제도 정비

- 배경
  - 최근 글로벌 리서치 기관, 컨설팅 그룹 등은 차세대 키워드로 ‘빅데이터’를 선정하고 그 경제적 가치에 주목
  - 국내의 IT 기업들은 빅데이터 시장의 선점과 주도권을 잡기위해 조직 재편, 역량강화, 기술개발에 주력
- 주요결론
  - 공간 빅데이터는 사회적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수단
  - 공간 빅데이터의 개방 및 공유를 통해 합리적인 정책수립과 산업발전 유도
  - 공공과 민간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빅데이터 체계의 구축이 필요
  - 국가의 현안문제인 복지, 재해, 부동산 분야에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실효성있는 정책수립 지원 방안이 필요
- 정책제안
  - 공간 빅데이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범부처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거버넌스 체계의 구성이 필요
  -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 빅데이터의 표준 및 품질확보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

※ 본 자료는 연구 활동 및 시정 업무의 참고자료로  
활용하기 위해 작성된 것임.

서울연구원 도시정보센터 출간자료팀  
email: [urbandata@si.re.kr](mailto:urbandata@si.re.kr)  
phone: 02-2149-1022